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第2回 國際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2. 9. 30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세계적인 脫冷戰化 추세로 국제질서가 再編되는 過程에서 1990년 韓·蘇修交 및 최근의 韓·中修交로 北方政策이 완결됨에 따라 우리정부가 추진해 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實現할 外的 環境은 造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北韓의 政策變化 여부가 향후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展望의 核心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民族統一研究院은 지난 해 「北韓社會의 實相과 變化 展望」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사회의 분야별 실상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北韓變化의 促進要因과 抑制要因을 연구·발표한 바 있다. 이어 금년에는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방향을 分析·檢討하여 向後 우리의 對北政策 추진에 참고하고자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이라는 주제로 9월 30일 제2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토론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일부 논문은 그후 저자가 토론내용을 감안하여 다시 손질하였으며, 토론의 내용도 책으로 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再編輯되었다. 본 보고서의 目次는 회의의 일정대로 構成되었다.

이 보고서가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에 대한 認識의 폭을 넓히고 統一問題 研究와 統一政策 樹立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2. 10.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目 次

序 文

開 會 辭	李秉龍	1
基 調 演 說	姜英勳	5
I. 第1會議：美國, 日本의 對北韓政策		17
1. 韓半島 情勢와 日·北韓 國交正常化 交渉	松永信雄	19
2. 美國의 對北韓政策	金英鎭	31
3. 討 論	朴慶緒, 崔相龍, 吉烜宇	39
II. 第2會議：中國,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51
1. 러시아의 對北韓政策：		
目標 및 不確實性	젠나디 추프린	53
2. 韓半島 情勢와 中 韓關係	高 鏞	73
3. 討 論	柳世熙, 文首彥, 崔宜喆	86
III. 綜合討論：向後 對北韓政策 推進 方向		97
附 錄：會議概要		109

開 會 辭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이라는 주제로 제2회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사회자·토론자로 참여하여 주신 국내외 학자·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이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붕괴는 세계적 수준에서 냉전의 종식을 가져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도 脫冷戰化 過程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북아 4강과 남북한간 관계도 구조적으로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1990년의 韓·蘇修交와 최근 성사된 韓·中修交, 그리고 美·北韓接觸과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日·北韓修交交渉 등이 그 실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동북아 4강과 남북한간의 關係再調整은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는 한편, 동북아에서의 和解·協力 추세를 가속화시켜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韓·蘇修交와 韓·中修交로 한국과 주변 4국간의 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이제 세인의 관심은 북한과 주변 4국간의 관계재조정의 방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심은 동북아 4국의 대북한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孤立政策을 버리고 국

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北韓의 改革·開放을 통한 對內外 政策變化와 體制變化는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질서의 안정에 핵심적인 변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남북간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對南政策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패쇄적인 체제와 對南革命路線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周邊環境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體制維持를 위해서 정책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4강의 대북한정책과 그에 따른 관계재조정이 북한의 정책과 체제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 전망하는 것은 북방정책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주년이 되는 現時點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구현의 국제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北方政策이 완결되었는 바, 이제 남은 것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關心事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의 時宜性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이해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各界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고 진지하게 고견을 교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
단하나마 개회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 9. 30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빈 면

基 調 演 說

姜英勳(大韓赤十字社 總裁)

1. 序 言

오늘 民族統一研究院이 주최하는 國際學術會議에 참석하여 基調演說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석학들께서 急變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變遷하는 4國關係가 對北韓政策에 어떻게 反映되었는가, 또는 韓半島 周邊4強의 對北韓政策이 어떻게 亞太地域 4強關係에 反映되었는가를 分析·檢討함으로써 東北亞 國際新秩序 再編過程의 성격과 남북한 統一環境의 성격변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貢獻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같은 회의의 기본성격에 비추어, 본인의 論旨은 대체로 세부분으로 나누어 (1) 亞太地域에서의 4強 - 미·중·일·러 - 關係變遷의 概觀, (2) 4強의 對北韓政策의 共通點, 그리고 (3) 4強의 對北韓政策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影響 등으로 要約될 것입니다.

2. 亞太地域내의 4強關係

第2次大戰 이후부터 國際政治社會에서는 美·蘇 兩超強大國

을 각각 主軸으로 하여 東西冷戰體制가 形成되었고, 亞太地域에서는 한반도관점에서 볼 때, 소·중·북한 北方三角關係와 미·일·남한 南方三角關係가 相互 對立된 樣相을 보여왔습니다.

蘇聯邦이 瓦解된 후, 각종 외교비밀자료가 百日下에 露出되어 國際政治學者와 歷史家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관해 詳細히 言及할 必要는 없는 줄 압니다.

이러나 저러나, 두 개의 三角關係에서 먼저 變化를 보게 된 것은 北方三角關係였던 것은 世人이 周知하는 사실입니다. 共產主義思想에 立脚한 共產陣營內 各국간 關係는 시간이 經過함에 따라 그 主義·思想의 非現實性, 虛構性이 露出되었고, 1962년 중국 新疆省에서의 親蘇세력의 蜂起와 彈壓에서부터 1969년 국경선에서의 中·소무력충돌 등 一連의 關係發展을 통하여 中·소 兩國 共產黨關係는 斷絶되었습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中共이 中·소 同盟關係에서 主敵으로 看做되었던 미국과 1972년 和解를 宣言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中·일관계도 미·중관계를 따라 점차 回復되어 갔습니다. 中·소관계 變遷, 나아가 北方三角關係의 變化는 미·일·남한 南方三角關係에도 變化를 促進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85년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소련내에서 권력을 掌握하고 開放·協力路線을 堅持하게 되면서 미·소관계도 急速度로 和解·協力の 方向으로 進展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연방이 瓦解되고 러시아연방공화국으로 改編되면서, 미·러양국은 금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大幅的인 核減縮에 合意

를 보게 되었으며 「制限된 核彈導武器攻擊에 대한 包括的 防禦體制」(Global Protection System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Strike) 構築에 同參하기로 함으로써 安保的 同伴者關係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미·러간 安保上 協力은 미·중, 중·일관계 개선과 함께 亞太地域에서 緊張緩和 趨勢를 加速化시키게 되었습니다.

上述한 情勢下에서 美國朝野는 海外駐屯兵力減縮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亞太地域에서의 美國兵力減縮 또는 撤軍問題가 討議對象이 된 것은 당연한 趨勢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國際經濟面에서 미·일대립이 亞太地域에서도 表面化되어 갈 때 兩國通商關係에 있어서의 摩擦은 미국의 反日, 일본의 嫌美감정을 誘發케 되었습니다. 亞太地域에서의 힘의 空白을 念慮하는 일본이 이와같은 情勢를 經濟大國으로 부터 政治·軍事大國化하는 好機로 活用하고자 하게 된 것은 國際政治의 力學關係의 不可避한 歸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UN에서 안보이사회의 常任理事國 地位確保를 試圖하게 되었으며, 「UN평화유지활동협력 (PKO) 법안」을 의회에서 通過시켜, 캄보디아派兵을 決行하게 까지 되었습니다. 일본의 國際政治研究機關이 國際新秩序構圖에서 미·일·EC 三極體制를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지도자들의 東北亞經濟協力關係構想을 일본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亞太地域에서의 日本霸權問題가 話題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亞太地域 國際政治面에서 미국의 影響力이 상대적으로 減少되며 일본의 軍事大國化현상이 급템포로 進展될 때 중국의 관

심을看過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經濟開發優先을 國策上 강조하며 일본의 投資 또는 經濟協力을 희망하면서도 亞太地域內 列強勢力均衡을 위하여 自國安保上 弱點을 補強하며 亞太地域內 安定과 平和問題에 관심을 가지고 그 對策을 위하여 腐心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이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觀察은 亞太地域內 4強勢力關係가 肯定的인 協力側面과 否定的인 對立側面の 二重性위에 形成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注意를 換起시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核武器를 自體生産할 수 있는 일본을 準核保有國으로 看做할 때, 核保有國間의 전쟁이 共滅을 의미하게 된 현실에서 韓半島 周邊4強間의 전쟁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서, 相互協力이 不可避할 것입니다. 그러나 相互利害對立, 緊張의 否定的 측면도 全的으로 無視할 수 없는 實情이라 할 것입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北方4個島嶼 領土問題라던가, 대만북방에 위치한 島嶼의 地下資源을 圍繞한 中·일간 管轄權問題라던가, 독도의 韓國領有權에 대한 일본의 不斷한 反對意思表明 등은 亞太地域內에 尙存하는 緊張要因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韓半島 周邊4強의 對北韓政策

韓半島 周邊4強의 勢力均衡關係에서 相互協力과 對立의 兩面性을 가지는 가운데, 周邊 4強의 對北韓政策에 있어 몇가지 共通關心事項을 看過할 수 없습니다.

그 첫째는 北韓을 包含한 韓半島上의 平和와 安定이 東北亞 全體의 平和와 安定에 緊要하다는 周邊 4強의 認識이라 生覺

합니다. 그러므로 4強은 北韓이 韓半島는 勿論 東北亞의 平和와 安定에 逆行하는 行動을 願치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北韓의 核開發에 대한 관심입니다. 현재로서 미·중·러·일 4국중 일본만이 核武器를 保有치 않고 있지만 前述한 바와 같이 결심만 하면 일본은 最短時日內에 核武器를 製造할 수 있는 潛在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일본의 核武器開發이 汎世界的인 核擴散禁止精神에도 符合되지 않지만 현재 東北亞 4強 勢力均衡關係의 變化를 不可避하게 만들 것이므로 北韓核開發이 日本核武裝을 刺戟하지 않기를 바라는 미·중·러의 立場에는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도 미·중·러와 協力關係 維持를 희망하는 見地에서 미·중·러 3국과 步調를 맞춰 北韓의 核開發 拋棄를 國交前提條件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北韓의 核武器保有가 確實해질 때, 北韓의 核武器開發을 抑制하지 못한 國際輿論이나 미·중·러 3국이 일본핵무기개발을 抑制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共通關心事로서는 韓半島 南北分斷狀況이 中·일 兩國 國益의 直接衝突을 緩衝하는 役割에 대한 認識입니다. 19世紀末 20世紀初에 일본과 帝政러시아가 兩國의 利害關係와 관련하여 韓半島上에서 直接衝突을 回避하기 위하여 39度線 上에서의 勢力圈 分割을 비밀리에 劃策한 政治的 흥정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을 想起할 때, 東北亞 強國으로 浮上한 중국과 일본에 의하여 또다시 同一한 政治的 흥정이 反復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기에는 아직도 不確實要因이 尙存한다 하겠습

니다. 韓半島上 一民族 二國家 存在는 統一國家보다 中·日兩國 利害衝突을 緩和하는데 오히려 有利하다 하겠습니다. 일본이 對北韓 關係改善에 熱意를 보이며 두만강유역 공동개발에 格外한 관심을 表明하고 金日成主席 80回 生日에 破格的인 祝賀使節團을 派遣한 것 등은 일본의 두개 韓國政策의 意思表示라 할 것입니다.

네번째 共通關心事는 中·日兩國의 對韓半島政策이 어떤 것이던 간에 미국과 러시아 兩國으로서는 韓半島 周邊4強의 勢力均衡關係의 安定이 亞太地域 全般의 安定과 平和에 絶對 必要하다는 立場에 서리라 생각되며, 世界的 規模로 形成되는 미·러 安保協力關係 立場에서 러시아로서는 美軍의 南韓駐屯을 反對할 理由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서도 亞太地域의 安定과 平和를 위하여 單獨 霸權을 行使하지 못할 망정 4強 勢力均衡關係에 있어 均衡者로서의 地位獲得을 위하여, 아시아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唯一한 海洋國家로서의 地政學的 短點을 補完하는 觀點에서 대한민국과의 安保協力の 重要성과 駐韓美軍 役割을 再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武力再侵企圖를 抑制하는 駐韓美軍의 役割은 冷戰構造의 變質과 더불어 亞太地域 전반의 安定과 平和維持를 위한 政策·戰略 手段으로서의 役割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미·중·러·일 4強 勢力均衡關係와 對北韓 共通關心 또는 政策은 北韓의 核開發拋棄가 現實化될 때 미국과 일본의 對北韓 關係改善, 나아가 國交正常化를 促求하여 미·일·중·러의 남북한 交叉承認 關係로 발전될 것으로 豫見됩니다.

4. 4強의 對北韓政策과 南北韓關係

韓半島 周邊4強의 東北亞政策一般 특히 韓半島政策의 變遷이 南北韓關係에 肯定的이던 否定的이던 間に 影響을 끼쳐 온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和解 霧圍氣가 남북한 7.4共同聲明을 내게 했고 고르바초프 蘇聯邦大統領의 對韓半島政策이 남북고위급회담 成事에 아무 影響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의 國交를 正常化하고 經濟協力關係를 進展시키고 있는 사실이 남북한關係를 平和統一 卽刻實踐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남북한 平和共存關係 構築에 肯定的인 影響을 주게 될 것임은 의심의 餘地가 없는 일입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加入한 오늘 기대되는 韓半島 周邊4強의 南北韓 交叉承認 關係는 실질적으로 韓半島에 2개 국가가 存在한다는 사실을 承認하는 것으로서 남북한간 武力紛爭을 國際的 性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같은 성격은 남북한 懸案問題 解決이나 民族統一을 위하여 正規軍 武力에 의한 어떤 企圖에 대해서도 유엔의 牽制 또는 國際輿論의 抑制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남북한 平和共存關係 樹立 노력은 鼓舞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이 亞太地域에서의 減軍을 이야기하면서도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의 再認識과 4強 勢力均衡을 위한 戰略的 價値의 再評價를 示唆하는 政策發言이나, 일본이 政治軍事大國化 過程에서 韓半島에 새로운 關心表明 등과 북한과 同盟·友好關係에 있는 소련과 중국의 對韓 國交正常化로의 政策轉換은 남북

한 平和共存 關係가 東北亞 또는 亞太地域 安定과 平和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韓半島 周邊4強의 對韓半島政策 또는 對北韓政策에 대하여 北韓當局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리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其實 自己體制維持를 위하여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와 패쇄된 사회 속에서 民生을 犧牲하고 막강한 군사력에 의한 統一戰略을 계속 追求할 것인가 또는 體制에 증대한 영향없이 開放·平和共存 方向으로 調整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에 북한은 當面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북한이 當面하고 있는 政策選擇上 딜레마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露呈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간 기본합의서에 雙方總理가 서명을 한 뒤 그 실천을 위한 분과위원회 협의과정에서 북한은 具體的인 合意導出에 아무런 熱意를 보이지 않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와같은 태도는 북한의 對南政策·戰略이 平和共存 方向으로의 修正이 困難함을 示唆하거나 또는 어떤 政策·戰略目標達成을 위한 遲延作戰인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韓半島 周邊4強의 對北韓政策이 북한의 그 동안의 對南民族解放戰略을 拋棄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좀 더 注意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5년 인도네시아 首都 所在 社會科學研究院에서 金日成 主席은 對南赤化革命 成功을 위하여 세가지 要件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北韓革命基地 완성, 둘째는 南韓革命勢力 組織強化, 셋째는 國際革命勢力과의 連帶 強化였습니다. 그 때

로부터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오늘, 과연 北韓共產主義자들은 赤化革命 成功을 위한 3개 要件이 어떤 水準에 와 있다고 判斷할 것이겠습니까? 國際革命勢力과의 連帶要件이 共產陣營 瓦解로 無意味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北韓共產主義者들도 首肯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에 비해서 越等한 군사력 건설과 所謂 主體思想에 의한 劃一的 思想教育 결과로 內心이야 어떻든 간에 表面上으로 一絲不亂한 국민들의 共產政權 支持를 볼 때, 北韓共產主義者들이 北韓革命基地 건설이 완성에 가깝다고 판단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군사력 增強을 위하여 極度로 惡化된 民生問題를 短時日內에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北韓革命基地 管理·經營 見地에서 南韓赤化革命 發起時機를 無限定하게 延期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의 苦悶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外信報道에 의한 北韓地方 食糧暴動이라든가 軍部隊內騷擾 발생 등이 사실이라면 남한에 대한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戰略上 時間問題는 날이 갈수록 그들의 고민 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北韓의 對南政策·戰略에서 誤判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同時加入하였으며 韓半島 周邊4強의 對北韓 交叉承認 時期가 臨迫한 狀況下에 國際壓力으로 南北韓 境界의 不可侵性이 提高되면서 北韓革命基地로부터 對南軍事行動을 6.25와 같이 發進하기 곤란하게 된 점을 마치 對南平和共存의 不可避性과 同一視하게 되는 위험성을 우리는 警戒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南北韓境界가 실지로 국가간 경계로 國際政治社會에서 認識됨에 따라 暴力에 의한 國境不可侵 性格은 北韓基地로부터의 支援에 의한 남한에서의 民衆騷擾가 남한내부의 自體現象으로서 북한과는 無關한 것이라고 強辯할 수 있는 口實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北韓基地 支援에 의한 남한내 民衆蜂起에 있어 북한에 대한 남한의 報復攻擊에 대한 抑制力으로서의 戰略效果를 가지게 되는데 그 目的이 있다 할 것입니다. 南北關係에 있어 북한 핵개발에 대한 남한의 至大한 관심은 일본의 핵개발에 대한 刺戟外에 사실상 남한내 民衆革命이란 名目下에 民衆騷擾를 북한이 비밀리에 支援하는 所謂 民族解放戰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考察할 때 韓半島 周邊4強의 對北韓政策이 남북한 平和共存 關係에 肯定的인 影響을 줄 수 있으면서도 베트남식 民族解放戰略을 根本的 意味에서 抑制할 수 없는 性格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 있어서 베트남식 民族解放戰略을 無力化시키는 길은 남한내에 民主政治文化를 暢達하여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對南赤化統一野望의 無謀함을 각성케 하며 國民總和의 實을 거두어 그들의 對南誤判을 막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結論的으로 韓半島 周邊4強의 勢力均衡體制下에서 4強의 對北韓政策은 韓半島上의 安定과 平和, 南北 平和共存關係에 많은 寄與를 할 수 있지만 韓半島上 平和의 最終保障은 民主主義 原則에 立脚한 南北關係의 確立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民主主義 原則에 立脚한 南北關係 確立을 위하여 남한의 先導

的 役割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本人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남한이 북한의 對南民族解放戰略에 適切히 對應한다는 것을 前提로 다음과 같은 段階로 발전되리라고 展望합니다. 第1段階에서는 남북한이 相互緊張을 緩和하고 危機管理次元에서 關係改善을 試圖할 것으로 보입니다. 第2段階는 남북한간 交流協力關係가 발전되고 相互依存도가 점차 높아지는 過程에서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民族同質성을 回復하는 過程이 될 것입니다. 第3段階에서는 民族同質性回復을 基盤으로 國家體制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짐으로써 統一國家가 건설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第1段階에 進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성급한 기대나 낙관적 전망 보다 忍耐力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한 남북한의 平和的 統一過程은 人類社會의 對立과 葛藤을 解消하는 건설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國內外 專門家들이 진지한 討議를 통하여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과 統一의 길을 위하여 많은 貢獻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 면

第1會議

美國，日本の對北韓政策

빈 면

한반도 정세와 일·북한 국교정상화 교섭

松永信雄 (日本 國際問題研究所 所長)

1. 日·北韓 국교정상화 교섭개시의 배경

1989년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1년 12월에는 동서 냉전의 한 축이었던 구소련이 붕괴되는 등 오늘날의 세계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의 파도는 한반도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한·소 국교정상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 금년 8월의 한·중 국교정상화 등 냉전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차례로 일어났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일·북한간 국교정상화교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하나이다. 일·북한 국교정상화 교섭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1990년 9월 24일 가네마루(金丸)부총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주변4대국에 의한 교차승인 거부정책을 전환하여 일·북한 국교정상화 교섭을 돌연 제안한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선 간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그 당시 한국과 소련·동구제국과의 관계개선이 진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노태우대통령은 유럽에서 냉전종식 움직임이 현저해지기 이전인 1988년 7월 「7·7선언」을 발표하여 소련·동구제국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밝혔다. 이 정책은 「북방정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1987년의 민주화,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통해 향상된 국제적 지위 등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북방외교」는 유럽에서 시작된 냉전종식의 움직임과 맞물려 눈부신 성과를 올렸으며, 한국은 1990년 상반기 동안에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동구 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당초 북한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특히 1989년 2월 헝가리가 동구국가중 최초로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했을때, 북한은 부다페스트로부터 대사를 소환하였으며, “헝가리의 행위는 미국의 조선분열책동에 가담한 범죄행위다”라는 지극히 강한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저항한다고 해서 동서화해라는 역사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으며, 1989년 11월 폴란드가, 같은 해 12월에는 유고슬라비아가, 그리고 1990년 3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북한이 군사적·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했던 소련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은 북한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극적인 한·소 정상회담 개최 이후 이 점은 명백해졌다. 당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부장관은 소련이 북한에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한·소국교정상화는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장애를 조성할 것이며 따라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부장관과 김일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북한의 반발이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북한

은 세바르드나제 외무부장관이 방북했을때 소련측에 전달된 비망록(memorandum)을 공개했다. 이 비망록에는 북한이 한·소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소련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한다면 “북한은 지금까지 동맹관계에 의존해왔던 일부 병기(핵병기?)를 독립적으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소양국은 같은 해 9월 30일 뉴욕에서 양국 외무부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수일 후 북한 로동당의 기관지 「로동신문」은 “달리로 팔고 사는 외교관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이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북한에게 한·소국교정상화 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대 무역상대국 소련이 석유 등의 수출품에 대한 지불을 종래의 우호가격이 아닌 경화결제로 하자는 통고를 한 사실이었다. 이것은 정체된 북한경제에 지극히 큰 타격이었으며 북한이 일본, 미국 등 서방과 관계를 급하게 서두르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가장 긴밀한 우방인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한·중간 무역량의 신장은 현저해 1990년에는 38억달러에 달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소무역(1990년 8억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무역만 볼 때 한·중관계는 한·소관계 이상 진전되고 있었다.

1990년 9월의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한국이 대규모 대표단을 보낸 것이나, 한국기업이 대회의 스폰서를 맡은 사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한·중양국이 무역사무소의 설치에 합의한 것 등은 한·중관계의 긴밀화를 상징하는 사건들이었다.

2. 일·북한국교정상화 교섭의 개시

상술한 상황하에 가네마루 부총재와 다나베(田邊) 부위원장 이하의 자민·사회 양당의 합동대표단이 1990년 9월 24일 북한을 방문하였다. 同대표단은 출발전 방문의 목적을 (1) 전후 장기간 비정상적이었던 일·북한관계의 대화창구 확보, (2) 1983년 11월부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제18호 富士山丸의 선원 2명의 귀환이라고 밝혔다. 대표단 가운데에도 同대표단의 방북이 일·북한 국교정상화의 계기가 된다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객관적인 정세를 돌이켜 보면,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모색했던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국교정상화 제안에 대해서,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에 무조건 응한다고 천명한 입장에 따라 전향적으로 대응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화」에 무조건 응한다는 것이지, 「국교정상화」에 무조건 응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양국은 1990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북경에서 3회의 예비회담을 열어 (1) 국교정상화교섭 1차 본회담은 평양, 2차는 동경, 3차 이후는 북경에서 개최할 것, (2) 본회담의 의제는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관련한 경제문제,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관련한 국제문제, 쌍방 상호관심사 등 4개로 할 것을 확인하였다.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 1차 본회담은 1991년 1월 30~31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측은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에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으로 임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즉, 일·북

한 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해,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성의를 갖고 노력할 것이다. 한편, 이 과정의 국제적 측면에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경제·정보 등 전반적인 면에서 진행된 국제적 상호의존 결과 어떤 국가도 자신만 좋으면 된다는 시대는 지나갔다. 일·북한관계의 개선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일·북한관계에 내재한 국제적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화하여야 하며, 일·북한 쌍방이 납득하고, 이 지역의 관계국들로부터 환영받고, 국제적으로도 축복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이성과 같이 일·북한 국교정상화에는 2차대전후의 비정상인 관계를 정상화하는 양국간의 측면과 더불어 국제적 측면이 있으며, 일본정부로서는 쌍방이 이러한 두가지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여 교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 움직임에 민감히 반응했다. 그리고 1990년 10월 가네마루 부총재가 북한방문 설명을 위해 訪韓했을 때 노태우대통령은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대하여 다음의 5항목에 유의해 달라는 요망을 피력하였다. (1) 한국 측과 충분히 협의할 것, (2) 남북대화와의 조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 (3) 북한의 핵개발문제 해결과 국교정상화를 연계시킬 것, (4) 국교정상화 이전에 경제원조를 하지 말 것과 경제원조는 북한 군사력을 지원하게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할 것, (5)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게 촉구할 것 등이다. 일본정부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일·북한 국교정상화를 이 지역의 관계국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며, 노태우대통령이 요구한 5항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국교정상화교섭에 임하고 있다.

3. 일·북한교섭의 현황

지금까지 총 7회의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 본회담이 있었으며 7차 본회담은 5월 13~15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까지의 회담을 통하여 상호입장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으나 쌍방 입장의 격차는 아직도 크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일·북한 국교정상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下記 4에서 살펴보겠지만 북한핵문제 해결의 전도는 교섭의 진행을 지극히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제 앞에서 지적한 국교정상화교섭의 4개 의제에 관한 주요 논점을 설명하려 한다. 먼저 첫번째 의제에 있어서는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 즉 북한의 관할권 및 범위, 과거 체결한 조약의 효력문제 등에 대하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관할권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북한은 분단국가의 일방이며,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있어 북한의 관할권이 미칠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일·북한 국교정상화가 일·한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북한은 “일본의 주장은 한반도에 있어서 2개 국가의 존재를 고정화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1910년의 일·한 합병조약 등 과거 일본과 조선이 체결한

조약에 관해서 북한측은 “이러한 조약은 체결당초부터 부당했고 무효이며, 일본이 이러한 조약을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과거의 조약은 벌써 무효이지만, 당시에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실시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국제법학계는 일·한 병합조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했던가 어떤가라는 문제와 일·한 병합의 도덕적 선악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하여 왔다. 2차대전후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인정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와 「지배권追及의 금지」 문제에 대하여 대화가 행하여지고 있다.

두번째 의제에서는 일·북한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경제적 諸문제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戰前의 36년간, 일본은 조선을 부당하게 식민지로 지배하였지만, 조선은 자주적인 투쟁에 의해 자신들이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 기간 동안 조선과 일본은 전쟁상태에 있었으므로 일본은 식민지시대 36년에 관해서 「재산·청구권」 처리와 더불어 전쟁배상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후의 45년간 일·북한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은 일본이 한국전쟁에 가담한 것 등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네마루 방북 당시 자민당, 사회당 및 조선로동당간에 서명된 「三黨共同宣言」에 따라 일본은 「전후 45년간의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시대의 36

년을 중심으로 한 「재산·청구권」 문제가 일·조간의 미해결인 것은 일본으로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북한간의 성의를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북한간의 교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패전국이 전승국에 대해 지불하는 전쟁배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후 45년간 일·북한 양국의 관계가 비정상 상태에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전체가 소위 냉전체제하에서 동서 양진영으로 갈라져 왔기 때문이므로 일본의 책임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45년의 보상」이라고 하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국제문제를 다루는 세번째 의제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 및 남북대화가 취급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관해서 일본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의 조기 완전이행과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 착실한 이행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조속히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일·북한국교정상화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하여 왔다.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는 일·북한교섭의 이후를 점하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下記4에서 자세히 기술하겠다. 남북대화에 관해 일본측은 북한이 남북대화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쌍방 상호관심사에 있어서는 북한내 일본인 배우자의 문제와 재일북한인의 법적지위와 대우문제 등이 취급되고 있다. 일본인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은 이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서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 전체에 연계될 수 없으며,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측은

일본인 배우자의 안부조사에는 응하고 있지만 이들의 일본 고향방문은 한 건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일북한인 문제에 관해서는 조총련이나 조선인 학교의 취급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4.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

上記 쟁점중에서, 앞으로의 일·북한교섭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핵심적 쟁점은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이다. 이 문제를 상세히 검토해 보자. 북한은 1985년 12월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체약국이 되었다. 그러나 동조약의 체약국은 조약체결 후 18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인 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장기간 안전협정 체결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이 영변에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여러가지의 핵관련시설을 건설중에 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고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 체결을 거부하는 최대의 구실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전체의 해상·지상발사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는 방침을 밝힌 핵군축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 노태우대통령도 「핵무기부재선언」을 발표했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 체결을 지연시킬 구실을 상실했으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일본, 미국, 한국은 상호간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 남북대화, 미·북한접촉 등 여러가지 채널을 이용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국제적 연대는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작년말경부터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후 이하 2개의 과정을 통하여 이 문제에서의 진척이 있었다. 첫째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 체결, 이행의 과정이다. 이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달성되었다. 즉 북한은 금년 1월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했고, 4월에 동협정을 발효시켰다. 그리고 5월에는 핵물질 및 핵관련시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말부터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임시사찰」을 받고 있다. 한편, 5월의 한스 브릭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의 방북을 통하여 (1) 북한이 영변에 재처리시설이라고 부르는 대규모시설(길이 180m, 계단건물)을 「방사화학실험시설」 용도로 건설중에 있으며 개략 건물의 80%, 실험시설의 40%가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 (2) 북한은 상기 「방사화학실험시설」에서 소량의 플루토늄 추출에 성공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두번째는 금년 2월에 발효된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정이다. 「비핵화공동선언」은 남북쌍방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 남북이 핵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 그리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남북상호사찰을 실시할 것을 규정짓고 있다. 동선언과의 관련해 특히 주목

해야 할 것은 남북상호사찰의 실현가능성문제이다. 금년 3월부터 남북상호사찰에 관한 대화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진전되고 있으나 사찰의 실시방법, 특히 북한의 군사기지를 사찰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점을 놓고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사찰실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런 면에서 핵무기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진전이 있었다고 하나 아직도 불투명한 부분이 남아 있고, 국제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동북아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금후에도 관계제국이 협력하여, 북한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교섭에 있어서, 북한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을 조기, 무조건, 완전히 이행할 것과 함께 남북상호사찰의 실시를 포함하여 「비핵화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조속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북한교섭에 있어서는 이 문제의 해결없이 국교정상화는 곤란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5. 금후 일·북한수교협상 전망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첫번째 의제의 기본문제 및 두번째 의제의 경제적 제문제에 대해서도 쌍방의 입장에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금후의 교섭 전망을 명확히 예상하기는 곤란하다. 한편, 북한을 둘러싼 정세는 일·북한 국교정

상화교섭이 시작된 이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냉각되었다. 엘친대통령은 금년 6월 한국의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와 북한과의 상호원조조약은 그 실질적 의의를 상실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었으나 경화결제제도 도입에 따라 1991년의 러·북한 무역은 중·북한, 일·북한 무역에 밀려 3위로 전락했다.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의 정상회담에 힘입어, 1990년 12월 노태우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고, 1991년 4월에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방일 후 제주도를 방문함으로써 급속히 긴밀화 되었다. 금년 11월에는 엘친 러시아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관계도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착실한 발전을 이룩했다. 그 결과 작년 11월에는 중국의 錢其琛 외교부장이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였고, 금년 4월에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의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마침내 금년 8월에는 한·중 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다. 최근에는 국교정상화에 힘입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노태우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국제정세하에서 북한도 조만간 일본, 미국 등 서방제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북한의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제국이 계속적으로 북한에 단합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금후에도 일본은 일·북한 교섭과정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북한정책

金 英 鎮 (조지와싱턴大 東아시아研究所 所長)

이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은 왜 최근 수 년간 미국의 대북한정책이 1988년 10월에 작성된 정책가이드라인의 틀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강경일변도였는지를 설명한다. 두번째 부분은 미국정부가 1992년 1월중순 캔터(Kanter)차관과 북한의 김용순간의 고위급 접촉에 동의하게 된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세번째 부분은 미국정부가 대북한정책을 수립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한다.

I

미국의 대북한정책이 1988년에 작성된 정책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부 분석가들은 부시행정부 아래서 미국의 정책이 상호주의 개념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으며 창조성이나 유연성, 혹은 진취성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수년간 미국의 정책이 경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북 관계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고위급대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이 —1992년 1월까지도— 조심스럽고 부정적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 미 의회와 정부에 뿌리깊이 스며있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미정책의 유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 분위기가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데 적절치 못하였다. 여기에는 관료적 속성과 안보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B. 관련 정부부처간 정책견해의 불일치.

C. 해당 국무부 부서내의 강력한 리더쉽 부족.

D. 정치지도자들의 한국문제에 대한 식견 부족.

E. 외교정책당국이 구소련과 중동에서의 사태진전에 우선적 관심을 쏟고 한국문제에 주목하지 못한 점.

F.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전까지 미-북한간 직접적인 정부간 고위급대화에 대한 남한 정부의 반대. 어떤 관료들은 이러한 남한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다른 관료들은 그들이 원치 않는 변화를 반대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많은 미국의 관료와 전문가들은 한국문제는 한국인들 스스로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이들의 경우 자신들의 정책적 입지를 견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들을 이용하는지 모른다. 이러한 견해는 무엇이 미국의 국익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관심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II

지난해 12월 남북간 비핵화선언과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된 사실을 회고해 보자. 이 두가지 협정이 있게 한 한반도내 사태진전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1월 중순 미국이 고위급 정치대화를 결정하게 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A. 미국정부는 남한이 이러한 협정들에 접근하는 방식과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이 보인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핵무장능력에 대한 억제를 포함하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우선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국내정치적 고려에서 자신의 전제조건을 포기하고 많은 북한의 조건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대북관계를 급속히 개선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남북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환영하는 미국정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명백했다. 이러한 한반도내 사태진전을 두고 미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북한의 의도를 직접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고위급회담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B. 미국정부는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미국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개진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그러한 직접적인 대화가 남한의 행동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C.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즉, 미국의

대북한정책이 경직성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IAEA 이슈(핵확산 이슈)를 급변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설명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었다. 미국이 고위급 대화를 갖기로 결정한 것은 학계, 언론계, 그리고 의회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그러한 비판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D. 남한정부가 북한이 내건 모든 조건을 사실상 이미 수용했기 때문에 당시 남아있던 유일한 문제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정부간 대화에 대한 북한의 요구였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안전협정 수용이 지체되는데 따르는 비난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적어도 한 번 정도 그러한 접촉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음에 틀림없다.

E. 12월의 역사적 문서에 합의하고 나서 남한은 미-북한간 직접적인 대화를 반대할 입장이 아니었다. 직접대화의 격상문제가 그 당시 남한과 미국정부간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F. 미국정부는 만약 IAEA 이슈의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해질 때 취하게 될 지 모를 군사적 행동에 대한 지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III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중단기 대북한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정책이 보여주게 될 1988년 정책들의 수정 정도를 평가하고 그러한 정책수정의 속도와 조건을 밝혀내야 한다. 여기서의 가정은 미국의 정책은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나 과거의 정책유형에 의해서 크게 영향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선택의 범위가 무엇이냐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네가지 측면, 즉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결정은 두 나라 정부간 대화문제, 즉 대화의 수준, 장소, 빈도, 범위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대화가 발생되는가의 문제이다. 예컨대, 정부간 대화의 수준과 빈도가 다른 이슈, 특히 미국이 보기에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에서의 진척에 명백히 연계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미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IAEA 안전협정의 이행, 2) 남북한 상호 핵사찰의 이행, 3) 북한의 미사일 수출문제, 4) 테러리즘을 포기한다는 믿을 만한 선언, 5)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척, 6) 한국전 유해의 정규적 반환, 7) 신뢰구축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 8) 반미선전의 중지, 9) 인권의 증진. 미국은 이것들이 전제조건은 아니고 다만 미국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관심사가 모두 일시에 충족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남북한 상호핵사찰과 미사일 수출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긍정적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보나 나은 양국간 관계를 향한

점진적이고 호혜적인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직도 불명확한 것은 미국이 판단하기에 고무적인 북한의 행동에 응답하여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조치가 무엇이나는 문제이다. 예컨대, 언제 그리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미국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수립에 동의할 것이냐? 그리고 무역대표부나 연락대표부와 같은 다른 형태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나? 라는 점 등이다. 장기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또다른 정치적 문제는 한반도통일 문제에 있어 미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것이다. 1989년과 1992년의 부시대통령 연설에서 표명된 것처럼, 미국의 입장은 한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위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두가지 이슈와 “한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위에서”라는 반복적 표현을 넘어 취하게 될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서의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언제 그리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현재 취해지고 있는 경제적 제재들이 수정되거나 재고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거의 모든 상업적, 재정적 거래는 외국자산통제규정과 수출관리법령 하에서 금지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품목의 인도적 교역은 재무부의 허가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학술적, 문화적 교류에 대해, 1988년 10월의 정책가이드라

인은 미국은 북한으로부터의 학술적, 문화적 목적에서의 비공식적, 비정부적 방문을 장려하며, 미국시민들이 가족방문, 학술적, 문화적 목적에서 북한을 여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부문에서 행사될 수 있는 정책의 선택폭은 교류에 대한 엄격성과 제한성(즉, 종류, 규모, 그리고 대표의 수준)에 있어서 다양하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남한과의 상호조약과 미군의 남한주둔에 대한 미국의 결정이 미-북한관계에 중요성을 가진다. 최근의 사태진전은 미-남한간 안보관계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군의 주둔문제(규모와 주둔장소, 유지될 무기체계의 유형, 철군계획)는 미-북한 관계에 대하여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 범주에서 중요한 것은 2+4 회담의 적합성, 보다 포괄적인 지역안보의 틀, 한반도와 지역 전체에서의 다양한 군비통제 조치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결정은 미국의 대북한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어떠한 고찰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포괄적인 내적, 외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시도된 분석에서는 이러한 모든 주요 요인의 중요성과 그것들이 실제정책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밝혀내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향후 수개월간 미국이 추구할 정책들

을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이 대통령선거 이전에 미-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어떤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 이 문제의 상대적 우선성은 낮은 편이다. 정책관료들은 다른 이슈와 국내선거에 사로잡혀 있다. 급진적 관계진전을 요구하는 중요한 압력집단도 없다. 진정 북한의 핵무기계획에 대한 억제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위급성은 어느정도 가라앉아 있다. 미국을 주저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전 부시 행정부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실책에 대한 비난이다.

2) 만약 북한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미국의 세가지 주요 관심사(IAEA 안전협정의 이행, 남북한 상호사찰, 그리고 미사일 수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미국정부는 대북한관계에서의 중요한 진전을 기록하게 될 상호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토 론

사회자: 金瓊元(社會科學院長)

토론자: 朴慶緒(中央大 教授)

崔相龍(高麗大 平和研究所長)

吉炆宇(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김경원: 지금부터 오전 제1회의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회의의 논문발표를 통해 마쓰나가 대사님께서는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라고 지적하신 점을 우리는 깊이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영진 박사님도 기대했던 바대로 값지고 예리한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하여 보다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말씀중 북한측이 핵문제에 대해 큰 양보를 할 확률은 거의 없으며, 또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에 한국이 지나치게 큰 양보를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흐려놓을 위험성을 지적해주신 점 공감하는 바입니다. 박경서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경서: 박경서입니다. 저는 주로 미국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온 관계로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의 논문이 미국의 시각에서 본 미국의 대북한정책이므로, 저는 한국에서 본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대북관계는 미국의 대북관계안에서 규정될 것인 바, 미·북한간 관계정상화는 한반도 주변 4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완성을 의미하게 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제가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현상유지정책을 견지하는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교착상태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미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보다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7·7선언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어 북한의 국제화, 다원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면 「핵문제」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 북한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아마도 북한의 변화추진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선거와 관련, 민주당의 집권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및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는 경우 1988년 이후 지속된 대한반도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김영진 박사님의 견해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경원: 감사합니다. 평양에 미국이 통상대표부를 설치하면 북한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지에 관해 참고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은 미국 대통령이 백기를 들고 항복해온다고 설명하였고, 한국의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의 논조는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중국외교의 위대한 승리라고 설명

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이스라엘과의 수교, 9월 한국과의 수교로 나머지 남은 하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상룡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최상룡: 김영진 교수님께서서는 대북한관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마쓰나가 대사님께서서는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정상화에 대하여 각각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첫째, 마쓰나가 대사님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일·북한 관계정상화의 4가지 조건으로 핵무기, 관할권, 보상 및 남북대화의 진척을 제시하시고, 일·북한 관계정상화의 주요이유 중의 하나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켜 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일·북한 관계정상화가 일본에 주는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이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마쓰나가 대사님은 논문에서 일본의 대북한 보상문제와 관련, 일본은 1945년 (해방)이후에 대한 보상은 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상을 차관방식으로 한다는 루머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영진 교수님은 논문에서 “미국의 입장은 ‘한국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위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통일이 라는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때 ‘한국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

이행, 남북한 상호핵사찰 실시 및 북한의 대외 미사일 수출금지 등 세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셨는데, 북한이 이 세가지 조건을 수용할 경우 미·북한관계에 큰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군사적 제재 가능성은 없는지요?

또한 핵문제와 미·북한 관계개선과 관련, 미국내에서도 국무성과 국방성간에 사안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북한간 및 일·북한간 관계정상화가 이제는 시간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지리라 보십니까?

김경원 :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본 회의의 주최측인 민족통일연구원의 길정우 박사입니다.

길정우 : 저는 김영진 박사님께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께서서는 두가지 서로 연관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 하나는 남북대화과정에서 취하게 될 미국의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 미국의 역할인바, 저는 전자에 치중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북관계와 남·북한관계에 있어 주된 문제는, 첫째,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과 전략에 대한 미국의 인식부족 혹은 의혹과 미국 행정부내 일치되지 않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우려입니다. 둘째, 한·미간에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차이 및 문제해결책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한·미·북한관계와 관련 언급하고 싶은 사항은 첫째, 남북관계 진전과 특히 북한의 핵개발문제에서 미국이 남한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또 그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실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북관계가 새로운 상황 및 여건하에서 전개되는 까닭에 남한내의 다양한 정책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러한 만큼 미국 등 동맹국과의 대북정책 조정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 행정부 관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인에게 중요시되는 사안에 대해 미국이 때로는 둔감성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북 밀수출건과 한국의 대북 쌀수출건의 경우 한·미 양국관리들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미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정책대안과 관련, 미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큰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태우 대통령의 뉴욕타임지와와의 인터뷰나 한국신문편집인 모임에서의 그레그 주미대사의 발언에서 보듯이, 북한의 핵무기개발의 위협이 당초 판단보다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한·미 양국에서의 해석은 제 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확대될 것을 감안할 때 미국도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합니다. 미·북한간 접촉수준을 일회성으로 격상시킨다든지,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와 마찰이 없도록 국내규정을 완화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과 관련, 한국정부의 입장, 정책, 전략이 미국의 정책수립에서 가장 중시될 것이며, 또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원칙정립과 입장수립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부 관계자들도 그들 자신의 입장이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원: 말씀 감사합니다. 약 15분정도가 남아 있으므로 토론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마쓰나가 대사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진 박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쓰나가: 먼저 최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북한관계정상화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일·북한 관계정상화는 한반도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 효과는 동북아시아 및 전세계적으로 파급될 것입니다. 동유럽 및 캄보디아 등 아시아에서의 사태변화가 전세계로 파급되었듯이 한반도문제도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본이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환경조성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일본은 세계평화와 안정에 보다 큰 정치적·경제적 기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군사대국화 지향에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안정과 경제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으며 군사대국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경제적 분야에서 일·북한 관계정상화가 가져올 이익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북한경제의 현 상황이 투자나 건설의 조건에 부합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발전된다면 북한은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대북한 보상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북한 관계정상화 교섭초기에 북한측이 전전 및 전후의 보상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1945년 이후시대의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며, 냉전의 와해로 통일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냉전의 종식과 공산주의의 붕괴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것은 논리적 귀결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민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결코 외부에 의해 결정되지도, 영향받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일본은 한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이며, 정치체제는 한국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고, 또 일본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는 매우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시장이 될 것이며 일본과 함께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민에

의해 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과 미·일간의 정상화 시기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는 않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함께 보조를 맞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일 양국이 협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수교후 9월 방콕에서 만난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은 이제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때라고 본인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일본은 북한이 보다 현실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미국에 관계개선의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저는 일본과 미국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남겨두고 혼자 북한과 정상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미국이나 일본중 어느 나라가 북한과 수교를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국이 협조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김경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진 박사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진: 제 논문은 학자의 견지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국정책을 보다 잘 설명하고 혹은 정당화하는 작업은 한국주재 미대사관 직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논문 가운데는 미

정부사람이라면 말하기 힘든 점도 포함되어 있고 학자의 입장에서 얘기했다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교수님 말씀은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서만 조·미관계 개선을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좀 더 신축성을 보여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사이의 고위급회담과 관련, 현재의 베이징 참사관레벨을 격상시켜서 고위층의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까지는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저 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핵문제 해결도 노력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여러가지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평양방문시 외교부, 당간부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표현에 따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조·미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의욕은 상당히 큰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한 외교부 간부의 표현을 빌리면, “위대하신 우리 김일성 수령님께서서 우리 조·미관계도 봄이 왔다. 그리고 미국대사관이 하루빨리 평양에 수립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수령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 공화국의 정책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선거문제,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의 문제인데, 아직 부시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클린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외교정책에 참여하게 될 분들이 쓴 글이 많이 있고, 또 민주당 집권시에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익단체, 집단의 주장 및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략 외교정책

의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비행기안에서 본 요미우리신문에 조셉 나이교수의 긴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에 한반도문제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만, 시간상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의 질문, 1989, 1992년 부시 대통령 자신의 표현을 빌려도 “on terms acceptable to Korean people” (한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미국정부 관리에 질문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뚜렷하게 그 이상의 것을 발표한 적이 없고, 구상은 있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지금 대답하기 힘듭니다.

또한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의 3대 조건,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 이행, 남북한 상호핵사찰 실시 및 북한의 대외 미사일 수출금지 등이 만족하게 해결되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셨는데, 미국은 아직 레벨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차관, 차관보, 부차관보 등으로 참사관 레벨의 회담을 격상시키고 장소를 뉴욕으로 옮기는 등 미·북한정부간 대화의 창구를 보다 격상시키고 정례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외교관계 수립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3개 전제조건이 모두 만족할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솔로몬 전 차관보의 작년 6월 8일 기자회견, 7월 8일 미의회 증언, 지난 2월 켄터차관의 미의회 증언 등을 보면 미국의 대북한 인식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중 재미난 귀절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솔로몬은 “absolutely not” (절대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정부내 전문가들이 북한과의 외교수립을 전혀 생각도 안해보고 구상한 적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말은 정책레벨에서 심각히 그 문제를 다루어보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괜찮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은 미국정부내 여러 의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off the record로 말씀드리자면 미 국무성의 입장과 국방성, 중앙정보부,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들간에 북한의 핵문제 및 대북한 강경자세의 타당성에 대해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수교 시기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미국이나 일본 양국은 모두 상대측이 먼저 수교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수교가 보다 용이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원: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회의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보다 넓게는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사회자의 입장에서 특히 결론이라고 도출할 것은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냉전이후 분단국의 통일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독일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독일수상 헬무트 콜이 최근 미국신문과 인터뷰한 내용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통일문제가 한참 부각되고 있을 때 고르바초프가 독일에 대해서 통일을 원한다면 NATO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력을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콜 수상은 모스크바에 찾아가서 고르바초프에게 만일 우리에게 독일의 통일이나 나토와의 관계 유지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나토를 택하겠다고 원칙에 입각한 자기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동독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문제에 있어서 전혀 양보를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호네커와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본에 맞아들였을 때에도 본회담에서 콜 수상은 한번도 웃지도 샴페인을 터뜨리지도 않았으며, 호네커에게 동독에서 서베를린으로 향해 오는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잡아가는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고 강력하고 분명하게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한 기록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유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계속 진행되겠고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이 갖는 선택의 범위에 관한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第2會議

中國,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빈 면

러시아의 대북한정책 : 목표와 불확실성

겐나디 추프린 (러시아科學院 東洋學研究所 副所長)

러시아는 지리적 위치와 인구구성 뿐만 아니라, 물질적·정신적 생활 및 그 과거와 미래가 서쪽과 동쪽에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라시아 강국이다. 따라서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학적, 문화적 환경에서 형성되는 러시아의 국익은 서쪽이나 동쪽 중 어느 한 방향에만 집중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까지 소련외교정책은 미국 및 서구와의 관계발전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명확히 서쪽 중심적이었다.

동쪽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과거에 비판되기는 하였지만, 전세계적인 미·소대립은 소련으로 하여금 정치, 경제, 군사적 노력을 서방에 집중케 하였고, 그러한 정책은 당시에는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 및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중단 이후에 서방중심의 소련·러시아 외교정책의 동기들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반면에 동방이 러시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공동체가 새로운 태평양 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문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해체 이후에, 또한 구소련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 중에 러시아의 “동방”정책은 군사우선정책을 경제우선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에서 새로운 주권국가들 (구소련 공화국들)의 출현, 러시아가 현재 약화된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서 국제무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

현단계에서 러시아의 제일 중요한 국익은 대부분 국내문제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국제관계에서 초강국 지위와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의도를 포기해야 한다. 위협인식도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대한 서쪽으로부터의 위협이 최소한도로 축소되어 왔다면, 동쪽으로부터의 위협은 최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증가되어 왔다. 러시아의 국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이슬람 원리주의로부터 올 지 모른다. 러시아에 대한 영토요구가 일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소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한 균형세력의 하나로서 역할을 중단한 이후 다른 역내국가들의 권력야심이 이 지역 안보상황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증대될 지 모른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 소련의 태평양 독트린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여 이미 잘 알려진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의 1986년 블라디보스톡 선언은 전세계적 현실이나 지역적 현실, 또는 국내적 현실을 더 이상 반영하고 있지 않다. 더 이상 미소간의 대립이 없으며, 소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양극의 세계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을 유일 초강국으로 하는 단극세계도 곧 사라질 지 모른다.

블라디보스톡 선언 당시 소련은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또 다른 초강국으로 생각되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신생 러시아는 규모와 화력에서 대폭 축소된 군사력이지만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력은 분명히 80년대 중반의 수준은 아니다. 특히 러시아의 지상군 규모가 중국, 북한, 한국이나 일본의 규모보다 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상황에서 그러하다. 구소련 군사력의 마지막 흔적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은 태평양 해군과 핵전력이나 이들도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현재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지역강국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강국으로 계속 남아 있다. 이는 러시아의 국제적 이해가 단지 접경국가들과의 관계로 축소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느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대적 중요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을 것이다.

* *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동아시아 국가들, 즉 중국, 일본, 몽골과 남북한이 지리적, 정치적, 전략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이유 때문에 중요시된다.

남북한과의 관계는 더욱이 러시아·소련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전한국 (Korea)간에 때로는 매우 긴밀했으며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웠던 1세기간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와 기타 구소련의 공화국에 거주하면서 자기 조상들 나라와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하여 적

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약 50만명에 달하는 강력한 한인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지난 50년간 한반도 상황이 항상 소련·러시아의 안보에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50년대 초에 “냉전”이 제3차세계대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닌 제1의 지역이었다. 따라서 소련은 지난 수십년 동안 사실 전략적 고려에서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북한은 소련의 동맹국 지위를 누린 반면, 한국은 모스크바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한반도정책은 명백히 일방적인 것이었다.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의 출현으로 소련의 한반도정책과 그 이면에 있던 철학은 급속히 그리고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모스크바의 한국관계는 본질적으로 개선되었고 건설한 정치적, 경제적 발판을 기초로 계속 발전되고 있다. 반면 북한과의 관계는 지난 2~3년 동안 하향적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기초 위에서 러시아·북한 관계가 안정되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의 관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현 대내적 생활변화 및 현 국제상황 변화를 고려하면서 러시아·북한간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타 관계가 예측 가능한 장래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분석하려는 데 있다.

* * *

현재 러시아와 북한간의 정치관계는 매우 불확실한 단계에

있다. 소련 지도층이 1980년대 후반에 서울과의 관계정상화를 결정한 이후, 특히 1991년 8월 모스크바에서 실패된 쿠데타가 소련에서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적 변화를 야기시키고 결국 소연방 붕괴를 가져온 이후, 모스크바와 평양간의 관계는 상당히 냉각되었다. 러·북한 관계는 러시아정부가 공산이데올로기를 포기하고 미국과 기타 서방국가들을 “자연적 동맹국”(natural allies)으로 선언한 이후¹⁾ 더욱 긴장된 상태로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제2차세계대전 말에 시작된 소련·러시아의 대북한관계 시대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종료 이후 45년 동안 소련은 북한의 주요한 동맹국이 되었고 북한에 대규모의 경제원조를 하였으며 한국전쟁 동안 적극적으로 평양을 원조하였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 소련은 북한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계속 하였다. 1961년에 소련과 북한은 상호군사조약을 체결하여 공식 군사동맹국이 되었다. 소련은 한국의 통일, 남한으로부터 미군 및 핵무기의 철수, 한반도의 비핵화와 같은 주요한 정치문제들에서 항상 북한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양국관계는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약속받은 1986년말에 아마도 최고에 달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김일성을 위하여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공식 리셉션에서 소련과 북한 지도층간에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한국 (Korea) 문제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정책을 공동으로 반대하기 위한

1) *Izvestia*, January 2, 1992 (in Russian).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²⁾ 그러나 소련은 이미 50년대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어떠한 군사충돌도 강력히 반대하고, 한반도 주변상황을 심각히 악화시켜 공개적인 전쟁행위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북한정부의 행동 (1969년에 미국 정찰기 격추가 이러한 경우의 하나이었다)을 (비록 간접적인 방법일 지라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 지도층은 소련이 북한의 경제발전과 군사현대화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소련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특히 60년대초부터 북한은 여러가지 정치적, 이념적 문제에 관한 중·소간 논쟁에서 점점 중국 편을 드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캄보디아 문제에 있어서 소련의 입장에 대한 북한의 반대가 이러한 경우의 한 예이었다).

평양의 친중 정책은 모스크바의 분개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련 지도층의 한반도정책 수정을 정당화시켰다.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행한 고르바초프의 연설은 향후 북한 당국이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평양측에 명백히 한 첫번째 신호이었다. 평양으로부터 매우 감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소련은 한국과 완전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소련의 붕괴 이후에 러시아는 국제관계에서 주요한 법적 계승국이 되었다. 소련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중요한 국제협정들은 법적인 면에서 현재 러시아를 구속하게 되었다. 이 가운

2) *Pravda*, October 25, 1986 (in Russian).

데는 1991년에 자동적으로 연장된 1961년의 소련·북한간 조약이 있다. 쿠나제 러시아연방 외무성차관은 1992년 8월 중순 기자회견에서 이 조약은 폐기되지 않고 계속 러시아와 북한간 관계의 법적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간의 규정들, 특히 군사규정은 러시아·북한 관계의 새로운 정신에 상응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외부세계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진부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조약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재협상과 수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조약수정의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양국관계의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모스크바와 평양간의 공식적이고 공적인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992년초에 중국, 일본, 한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그의 방문계획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제외시켰다. 러시아의 신문과 잡지들은 북한에 관하여 매우 비판적인 기사들을 계속 실었다.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 조차도 그러한 출판물에 의하여 비판되어졌다. 양국간 경제관계는 축소되고 있다. 예술가, 운동가, 학술원 회원들의 방문교환이 극소화 되었다. 특히 옐친 대통령은 1992년 11월 중순에 한국을 공식방문할 예정이나 평양방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의 국가적 관점으로부터 판단할 때 이러한 정책의 계속이 러시아에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인지 예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러시아는 다른 주요 국가들 - 미국, 중국, 일본 - 과 비교할 때 최근까지 평양 및 서울과 완전한 외교관계를 갖고 있던 유일한 국가이었다. 러시아정부는 이를 좋은 기회

로 이용하기 보다는 북한에 비판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현 북한 지도층뿐만 아니라 차세대의 반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평양에 대한 러시아의 비판적 태도가 현 북한 지도층으로 하여금 현존의 북한 정치와 경제모델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정부는 북한의 현정부가 단명으로 끝날 것이고, 동구에서 발생된 것과 유사한 매우 근본적인 대내적 정치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행동할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럴 듯 하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비록 어떠한 사회도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할 지라도 그러한 개혁은 상이한 사회에서는 상이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최근 베트남의 경험은 공산주의 경제발전 모델이 개혁과정에서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적 가치들을 필연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고 현대의 요구들에 적절히 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는 몽골의 경우이다. 몽골에서 1992년 6월에 실시된 총선 결과는 근본적인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널리 받아들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민 절대 다수의 정치적 선호도를 보여 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김정일과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아마도 중국을 모델로 하여 경제개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만약 성공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모스크바가 아닌 다른 곳에 감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지도층에 민주적 가치들을 권유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 국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지만 모스크바가 평

양과의 관계에서 전달해야 하는 다른 더 절박한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국가들이 의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의하여 야기될지 모르는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 위협이다. 이 경우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예측하기가 매우 쉽다: 북한의 핵군사력 개발로 위협을 느낀 한국과 일본이 아마도 독자적인 핵무기 생산을 시작할 것이고, 이는 러시아 영토의 근접지역에서 매우 폭발적인 상황을 창출할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서방의 일부 전문가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의심되는 북한의 핵군사 프로그램이 단지 허세일지라도 이러한 허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이다.

물론 현재의 우려와 의심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하여금 영변에 있는 핵재처리센터를 포함하여 모든 북한의 핵시설을 완전히 사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스크바는 북한이 “필요한 것보다, 그리고 외부세계가 알고 있던 것 보다 더 자세한, 북한의 핵산업을 포함하고 있는”³⁾ 핵시설에 관한 포괄적인 명부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다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환영하였다.

미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및 기타 국가의 일부 분석가들은 정기적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어떠한 의구심

3) *The Economist*, London, May 16, 1992, pp. 93~94.

을 넘어서 북한의 핵무기생산능력 부재를 외부세계에 확신시키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시설에 대한 강력한 사찰이나 또는 특별 사찰에 대한 동의를 북한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요구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의 협조를 기대하는 수단으로는 최후통첩 보다 는 외교적 설득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핵문제가 러시아 외교정책과 전략 수립가들에게 즉각적인 우려를 자아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반도에서 평화, 안보, 협력의 확보와 결국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라는 커다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1991년 11월초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세르게이 로고프 당시 소련외무성 극동국장은 “우리는 (소련정부는) 평양과 서울간의 대화와 남북간의 정치, 군사 대결의 극복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달성하는 핵심요소라고 굳게 믿고 있다”⁴⁾ 고 말했다.

남북대화에 대한 이러한 소련의 태도와 한반도의 평화유지 및 신뢰구축 노력을 위한 소련의 역할은 러시아에 의해 근본적으로 계승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 외교정책의 주요한 기조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모스크바는 남북한이 1991년 12월 평양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을 때

4) Soviet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the 1990s. Nuclear Issues and Arms Control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eoul, 1992, p. 28.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동시에 조인된 또 다른 문서, 즉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과 함께 이 협정은 남북한간 상호신뢰구축 및 협력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러시아는 보고 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성공은 환영할 일이며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은 한반도에서 정치적, 군사적 대결상태의 지속이기 때문이다. 민족적 화합의 실패는 평양과 서울을 더욱 적대케 할 뿐만 아니라, 주요한 주변 세력들의 입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하나의 징후는 파울 월포워츠 미국방차관이 1992년 6월 23일 쿠알라 룸프르에서 행한 연설에 나타나 있다. 그는 당시에 “북한의 핵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안보상황을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우리들은 잠재적인 핵위협 때문에 한국에 대하여 계획된 제2단계 감축(약 6,500명)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⁵⁾라고 말했다. 한국으로부터 미지상군 철수에 관한 시간표의 이러한 수정은 러시아 국경 인접지역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주둔을 연장시켜 현재 미·러 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국가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는 또한 어떠한 북한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외국군대의 완전한 철수가 없는 한 통일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조기통일 기회를 위협할 것이다.

5) Remarks by Honorable Paul Wolfowitz, US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ISIS Conference, Kuala Lumpur, June 23, 1992, p. 13.

물론 한국통일은 우선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한국민의 내부 문제이다. 그러나 통일의 성공은 외부 강국들이 깊숙히 관여 하여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가장 첨예한 대립상황의 하나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러시아 국익이다. 러시아와 미국이 대내적인 이유로 지역군사력을 축소시키는 과정에 있고,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일본은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전후 안보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즉 일본은 방위비를 절대적·상대적 규모에서 증액하고 자국의 군사통제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파병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때에 더우기 통일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국제관계 상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일본 군국주의의 쓰라린 경험을 가졌던 전 한국(Korea)은 장차 그러한 군국주의의 부활에 반대하는데 러시아의 자연스런 동맹국이 될 것 같고, 통일될 때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더 영향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수행되기 이전에라도 러시아정부는 지역안보 문제에 관하여 남북한과 정책들을 조정하는데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관점으로부터 판단할 때 대량의 플루토늄을 만들고 있는 일본에 대한 평양의 되풀이 되는 경고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평양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의 위반에 대하여 모스크바가 비판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군사핵기술

비확산원칙의 위반에 반대하며, 핵비확산조약 (NPT)을 체결한 국가에게 핵정책을 명백히 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가 수렴될 지 모르는 또 다른 외교정책 문제는 전통적이며 비전통적인 안보문제에 관한 다자간 대화에 북태평양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태평양 안보협력대화(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를 창설하려고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의 제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계획은 검토단계에 있는데 모스크바와 평양은 이를 정식으로 지지함으로써, 또한 이 지역에서의 신뢰구축과 협력에 관한 자신의 제안을 추가함으로써 그 창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자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공동의 (또는 조정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

러시아·북한간 경제관계는 정치관계와 같이 현재 하향경향을 보이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나 근본적으로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를 곤란케 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의 결과 때문이다. 러시아는 국가 통제가격에 기초하여, 특히 천연가스와 같은 주요한 생필품에 대한 북한의 수입을 보조하여 북한의 병든 경제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이전의 양자관계 모델 유지를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있으며 사실 이를 단순히 유지할 수도 없다.

러시아에서 최근의 국내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결과로 러시

아정부는 더 이상 지방사기업과 半사기업 및 공기업에 어떤 가격으로 어느 곳에 수출이나 수입을 하도록 명령할 입장에 있지 않다. 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얻은 이후에 자유로이 이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 파트너와 사업 관계를 추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연히 러시아의 기업들은 상호이익이 된다면 북한과 유사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관계는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북한간 1991~1992년 양자무역량이 인위적으로 후원되어 80년대에 유지되었던 수준보다 훨씬 못한 70년대 중반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만약 러시아·북한간 경제 및 무역관계가 전통적인 정부 대 정부간 기초위에서 유지되도록 한다면 (특히 현재 변하고 있는 러시아 공기업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급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현재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섬, 특히 블라디보스톡과 나호드카 지역에서 진행중인 경제개혁이 성공한다면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지 모른다. 이 곳의 지방행정 당국은 서방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만 아니라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환영받는 자유경제지역을 창설하는 과정에 있다.

대립되는 이해관계로 인한 장기간의 우유부단하고 정체된 상태를 벗어나 이 지역에서 실용적인 경제정책이 현재 급속히 수립되고 있는 것 같다. 상징적으로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르바초프가 그의 유명한 연설을 한후 시작된 불확실과 실현되지 않은 희망의 시대는 6년 후 블라디보스톡이 공식적으로 “개방 도시”로 선언된 1992년 중반에 종료되었다. 블라

디보스톡은 건설된 지 132년 후에야 비로소 주요한 지위를 회복하였다. 즉 블라디보스톡의 개방은 이 도시가 태평양 연안에서 러시아의 무역과 금융의 주요한 중심지로서 이바지하게 되었음을 외부세계에 알리는 것을 의미하였다.

모스크바에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자치권의 일부를 인정받고 일부는 대립을 보인 러시아 극동의 지방행정 당국은 경쟁적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입찰을 하며, 외국파트너와 다른 직접적인 사업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미 그들이 새로 획득한 권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의 최종 목표는 연해주와 사할린 섬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이 지역의 발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 소련경제 입안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최근의 노력은 완전히 상이한 발전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다: a) 군사우선정책이 경제우선정책으로 대체된다; b) 그 이행을 위한 재정, 기술, 노동 자원들이 우선적으로 지방 자원이나 또는 외국으로부터 조달되는 것으로 러시아 중앙정부 예산으로부터의 배당을 기대하지 않는다; c) 현재 지방행정 당국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결정을 적시에 내리고 이행하기 위한 전례없는 권한을 갖는다.

“지역경제개발”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1차적으로 연해주와 사할린 섬 개발을 위한 계획을 말하기는 하지만, 러시아 극동개발이 러시아, 중국, 일본, 남북한의 중대한 이해

가 교차되어 있는 환일본해 경제권 개발의 절대필요한 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실제적으로는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지역경제개발”의 이러한 2가지 해석은 또한 러시아·북한간 경제 및 무역관계의 장래를 2가지의 상이한 관점에서 계획하고 있다.⁶⁾ 협의의 해석하에서 이러한 관계들은 주로 양자관계로서 이해되어지고, 광의의 해석하에서 이들은 다자간 경제프로젝트들의 일부로서 발전될 것이다.⁷⁾

사실 러시아, 중국,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하나가 유엔개발프로그램 (UNDP)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두만강 어귀 주변지역의 항구, 도로, 철도, 공항시설들의 현대화나 설립, 중국 도시 훈춘으로부터 하류로의 준설작업, 제조업 설립 등을 포함하는 자유국제경제지역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의 총경비는 약 3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최소한의 경비 평가일 것이다. 유엔개발프로그램은 이미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82만 5천달러를 승인하였다.

일전에 두만강 프로젝트는 매력적인 제안인 것 같이 보인다. 이 계획이 실행 될 때에 러시아, 중국, 북한과 아마도 일본 및 한국 이외에 여러 국가들로 하여금 경제잠재력의 보완성을 기초로 지역경제협력을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 프

6)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Takashi Sugimoto, *The Dawning of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Area*, IIGP Policy Paper 75E, Tokyo, March 1992, 참조.

7) Vladimir Oreshin, *Chinese Economists on Prospect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Basin*, Moscow, April 27, 1992 (in Russian).

로젝트는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에 매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두만강 어귀에 접경하고 있는 각국의 일부 영토들이 개발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자간의 경제적 노력이 이들 요구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관점에서 보면 두만강 프로젝트의 수행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러시아 부분을 재정지원하기 위한 자원결여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해주 경제개발이라는 러시아 자체계획에 대한 더 심각한 도전은 두만강 어귀를 훈춘 및 더 북쪽에 있는 치타 지역의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계획이다.

이것이 완료되면 이 고속도로는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하는 현재의 노선과 비교할 때 일본 니가타항구로부터 치타까지의 운송로를 1,500km 만큼 단축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럽과의 통과무역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톡과 나호드카 항구를 갖고 있는 연해주를 제외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만약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프스크의 운동시설 및 가공시설들이 무시되고 러시아의 역할이 원자재 공급에만 축소되어진다면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의 수행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특히 두만강 프로젝트가 러시아의 포시에트 항구로부터 북한의 나진항 (또는 웅기)과 중국 훈춘의 약 100 평방킬로미터 지역을 포함하는 이른바 “황금의 소삼각” (또는 “소삼각”)에 한정된다면, 러시아가 이 프로젝트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반면 러시아는 두만강 프로젝트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북한의 청진항 및 중국의 연길에 의하여 형성되는 약 만 평방 킬로미터의 “황금의 대삼각” (또는 “대삼각”)을 포함한다면 더 관심을 갖게 될 지 모른다. 이 경우에 연해주와 치타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개발하려는 러시아 자체 계획은 두만강 개발 개념에 구체화되어 있는 자유국제경제지대 개발계획과 연계될 것이다. 이외에 러시아와 기타 구소련 공화국들에 있는 한인공동체는 또 다른 다자간 경제협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러시아 극동에 한인자유경제지대의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의하면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지역한인 공동체의 노력과 결합되어 다양한 천연자원을 가공하고 이들을 해외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창설될 수 있을 것이다.⁸⁾

물론, 러시아·북한간 경제관계의 장래는 연해주나 사할린 섬에 자유경제지대를 개발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나 두만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유엔개발기구 계획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도, 의존해서도 안될 것이다. 러시아·북한간의 경제관계의 근간은 상업적, 기술적, 기타 경제적 교환을 계속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일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간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초는 소련이 70개 이상의 기업건설을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마련되었다. 이들 중에는 강철공장, 자동차 배터리와 전기모터 및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기업건설을 위해 사용된 차관은 북한이 소련에 생산품의 60~80%를 이양함으로써 상환토록 되어 있다. 그러

8) *Bulletin of Foreign Commercial Information*, Moscow, April 28, 1992 (in Russian).

나 이러한 조건의 이행은 지연되어 왔으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채무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규모와 중요성에 있어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스크바의 평양에 대한 무기판매, 특히 새로운 첨단군사기술의 판매일 것이다. 이미 1991년에 무기판매는 전혀 없었으며, 향후에도 과거 북한에 이양된 군사장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품과 기타 물품의 판매가 완전히는 아닐 지라도 상당히 축소될 것 같다.

결 론

러시아·북한간 관계에서 현재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강한 논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1961년 조약의 수정을 기초로 하는 관계개선은 모스크바가 평양을 직접 다루는데 있어서 상호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양자간 문제들과 국제적 문제들의 해결을 촉진할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 일반적으로는 역내국가들간의 관계에서, 특별히 남북한간 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의 증진;
- 일반적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핵기술의 비확산: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의 엄격한 이행;
-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의 중단과 한국으로부터 외국군대의 점진적 철수;
-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방지;
- 국제테러와 마약 불법거래를 포함한 비전통적인 안보문

제에 관한 협력;

- 양자간과 다자간 경제 및 무역관계의 증진: 미해결된 상환문제 및 부채문제 해결;
- 양자간 문화, 과학, 체육 및 기타 교류의 증진.

한반도 정세와 중·한 관계

高 鏞 (中國 國際問題研究中心 副總幹事)

I. 냉전 종식의 지대한 영향

냉전 종식과 세계정세의 변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계는 심각한 시련이었음이 명백하다. 舊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은 국내정치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외교활동의 초점을 남한으로 이동하고 있다. 구소련이 1990년 9월 30일에 발표한 남한과의 국교수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적 곤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1990년 10월 5일자 (북한의) 로동신문은 소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이 사설은 소련이 약간의 달러획득을 위해 (북한을) 매각하였다고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두개의 조선을 획책하는 미국의 기도에 동참·협조하고, 미국 및 남한과 함께 북한을 봉쇄하고 있다고 매도한 것이다.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의 외교활동이 서구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북한에게 새로운 외교적인 문제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원조의 중단과 무역대금 경화결제 요구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 가중케 한 것이다.

유엔 회원국 자격취득에 대해서 북한의 종래의 유엔 단일의석 확보주장도 강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병행하여 남한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도 진척되어 승인국가들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실제적으로

남한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강력한 국제적인 역량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독일통일 이후, 한국의 신문들은 독일통일과 유사한 한국통일방식을 강력히 옹호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에 대해 심한 압력을 가하는 소란을 잠시 일으켰다.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개입하여 북한에서도 동유럽과 같은 변화를 재현키 위해 모든 종류의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 바, 특히 핵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중시켜 왔다. 미국방부는 2월 26일 북한이 6월까지도 핵사찰 수용을 거부할 경우에 미국은 모종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2월 25일 동경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미국의 조치 중에는) 군사적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상욱 한국외무장관은 북한이 빠른 시일내에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틀안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2월 29일 통일문제에 대한 장관급회의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핵사찰의 조기실현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북한의 조기 핵사찰 수용이 남·북한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 역시 북·일수교 교섭에 있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였다. 6차 북·일교섭에서 일본은 북한이 핵사찰 수용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한 쌍방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북한측은 일본이 내세우는 전제조건이 양국관계정상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거절하였다. 격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다.

구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의 급격한 변화는 주로 국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사회주의 기본원칙고수의 실패와 부분적으로는 외부에서의 유혹과 선동이 결합되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黨의 강력한 지도력과 내부단결에 의지하여 서방로부터의 압력에 대처하였으며 그 곤란을 극복함으로써 지금은 착실한 발전을 하고 있다.

II. 대내외정책의 점진적 조정

구소련과 동유럽의 교훈을 수용하고 국가가 처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부분적인 대외개방을 개시하였다.

북한정부는 이미 1984년 9월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1986년 말까지는 상점과 음식점을 합작 개설하는데 그치는 느린 발전이 있었을 뿐이다. 1987년부터 섬유, 의복, 포장, 음료, 기계설비와 광업분야에서도 합작사업이 조금씩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말 이러한 합작기업은 130개에 달하였으며 1억달러를 상회하는 최고조를 이루었다. 동시에 북한은 30개이상의 해외 합작기업을 설립하였다.

남·북한간 약간의 직·간접 경험과 경제교류도 착수되었다. 현대그룹의 명예회장 정주영씨는 1989년 3월 평양방문중 금강산 수력발전소 건립과 금강산 관광개발에 합의하는 서명을 한 바 있다. 1991년 대우그룹회장 김우중씨의 평양방문에서는 남포에 8개의 경공업 합작사를 건립하는데 양측간 합의가 이

루어졌다. 경제문제를 전담하는 김달현 북한부총리는 경제팀을 이끌고 7월 19일에서 25일까지 실사단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단은 남측과 경제문제를 협의하고 조선소, 자동차공장, 제철소, 기계설비공장 백화점과 상점들을 포함하는 12개이상의 산업시설을 방문하였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개시이래 새로운 발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일본, 홍콩, 기타 여러나라와 지역과 광범위한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두만강하구지역 개발을 대외개방의 우선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12월 나진 선봉지역의 62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공시하였으며 나진·선봉의 3개 항구와 청진부근을 자유항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이 지역에 30억불 상당의 대외투자를 유치키 위한 계획이었다.

최근에 북한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UNDP는 이미 북한이 해안해양연구훈련센터와 같은 기술적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 있다. 두만강하구개발사업에 있어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구의 하부구조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UNDP와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여러 재정담당기구에 도움을 청하고 있으며 산업시설보호협정과 지적보호권 협력조항에도 조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외개방은 아직 많은 대내외적 장애로 인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또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북한은 국제적 위상 개선을 위해 대외정책에 있어 보다 많은 유연성을 보여 왔다. 수십년간 북

한은 미국과는 아무런 쌍방간의 접촉도 없이 적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지금은 국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과 비정례적인 공식접촉을 시작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최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미국은 세계의 이목을 끄는 쌍방간의 관계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본인은 지금까지의 쌍방간의 비정상관계는 한마디로 동·서양 냉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비정상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정치가들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주성을 향한 현재의 조류에 함께 하고 그들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킨다면 (쌍방간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방도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북한의 대일 관계정상화교섭은 1991년 1월부터 시작되어 많은 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의견 차이가 회담의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에 의해 견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앞서 북·일간 협정을 체결할 결심을 앓고 있다.

1월 30일에서 2월 1일에 있는 제6차 북·일 교섭에서, 일본측은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문서에서 남·북한의 실제적인 통치구역을 확실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북한은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두개의 국가”의 존재를 합법화하려 있다고 비난하였다. 현시점에서 남·북한 쌍방은 상호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간주하지 않고 통일과정에서 형성된 특별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보아야 하며 그들의 관계를 두개의 국가관계로 대하는 의식구조를 포기

하여야 할 것이다.

핵사찰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긍정적이고 화해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1992년 1월 30일 IAEA와 핵안전협정에 조인한 이후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의 압력에 대항하고, 북한의 정치일정에 따라 4월 초에 거행된 제9차 최고인민대회 3차 회의에서 이 협정을 비준하였다. 그 이후로 북한은 핵시설과 연구소에 관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5월 4일에는 핵물질요소에 대한 보고서와 상세한 핵시설 관련 리스트를 공개하였다. 북한은 5월 11일 IAEA 회장인 Blix씨와 그의 사찰단을 북한에 조치하여 영변에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핵시설, 연구소와 공장들을 계획대로 시찰케 하였다.

Blix씨는 북한이 자력으로 핵연료개발에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음을 언급하였으며 북한이 電力생산에 이용할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표방하였다. 그는 또 IAEA팀이 수 주일 내에 북한의 핵사찰을 위해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보고서와 리스트에서 언급된 모든 장소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접근과 진상조사단이 방문하고자 하는 어떠한 장소나 기관에도 방문을 허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존중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남·북한간의 상당한 불화로 유엔국회원자격 취득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유엔 가입을 분리 신청하는데 동의하였다. 현재 유엔에서 북한은 더 많은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

한의 대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

남·북한은 수년간 적대와 불신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대결 상태를 고착화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정세가 긴장에서 완화로 변화됨과 남북간에 승자와 패자를 구별할 수 없는(no-win) 상황추세로 인해 양측은 이제 기본적인 국가이익 관점에서 출발하여 상호이해와 협조라는 정신아래 행동하고 있다. 이리하여 양측은 「남북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는 한반도 분단 이후 40년만에 달성한 진정하고도 구체성이 풍부한 첫 협정인 것이다. 김일성주석은 정원식국무총리가 이끈 남측대표단과의 면담에서 同협정이 국가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획기적인 이정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민족대단결을 모색하는 것이 남·북한 협정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해와 통일달성을 위해서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점을 초월하여야 한다고 부언하였다.

정원식국무총리는 김일성에게 대결의 시대는 가고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말하였다. 노태우대통령은 이 협정이 남북한 평화를 위한 기본틀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환영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 정상회담개최를 요구하였다. 물론 이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과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의 사실들은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방언론이 암시한 것처럼 만일 북한이 정책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과거의 습성에 집착하였다면, 한반도에서 현상태와 같은 발전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Ⅲ. 발전과 현존하는 장애

세계적인 세력구도의 변화는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내외적 현실에 직면하여 화해와 협력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이다. 양측은 현재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된 군사적 대치와 심대한 군사비는 양측 모두에게 해롭다. 남측은 약간의 경제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부터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그리고 기성 정치권내에서도 대통령制 혹은 내각制 채택을 둘러싼 무수한 대립이 있다. 경제성장은 완화되고 있으며 산업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인 환경을 대단히 갈망하고 있다. 북한 역시 군사비지출의 부담을 줄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평화적인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원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김일성주석은 남·북한 공히 국가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군축을 개시하여야 하며 지금은 외국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거나 외국군사기지가 설치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남북한이 공히 침체국면에서 화해로, 대결에서 대화로 변화되는 것은 한반도발전에 있어 주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한반도통일이 실현되기까지는 몇가지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1.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대체되어야 한다. 양측에 10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지속적으로 무력대결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추세에 反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남북한 경제발전에 견딜 수 없는 지출인 것이다. 이리하여 군축은 공동의 요구로 되고 있다.

2. 한국군사정전위원회는 한국전의 역사적 유산이다. 이의 해체를 위한 논의가 양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약 4만명의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민족의 국가존엄성을 해치고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인민지원군이 1958년 북한을 철수한지는 어언 30여년이 지났다. 지금은 남·북 양측이 화해로 돌입하고 있어 지속적인 미군의 존재는 다만 평화통일을 향한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
4. 평화적 통일은 남·북 양측이 강조하고 또 주변국가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한국통일의 실현방법은 남·북한 양측의 결단에 달려있다.

IV. 중·조, 중·한관계

중국은 한국의 인접국가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안정유지에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한민족은 고대로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이들의 문화는 상호 연계되어 서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의 생활양식은 近似하여 서로 쉽게 교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의견의 차이점을 덮어둔 채 공동의 목적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양측은 상이점보다는

유사점이 훨씬 많은 것이다.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투쟁에 있어서, 양측국민은 합심하여 싸워왔으며 친밀하고 심오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對日제국주의 항쟁기간중,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 게릴라부대는 중국땅에서 중국의 항일전쟁을 도왔으며 중국인민들은 게릴라부대의 발전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한국전 기간동안,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인민군과 함께 싸워 미제국주의는 격퇴할 수 없다는(invincibility) 신화를 날려보냈다. 신생중국이 건립되고 중국이 막대한 곤란에 처했을 당시에 중국인민들은 조선인민(북한)을 도왔다. 한국戰의 잔해속에서 중국인민은 또 다시 전력을 다해 조선인민들이 戰痕을 치유하고 조국을 재건설하는 노력을 원조하였다.

냉전이 종식되고 서방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핵개발문제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현재에도 중국은 정의를 받들고 어떤 형태의 제재에도 반대하며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모색을 지지하고 있다. 戰時, 혹은 평화時에, 朝·中인민의 우애는 모든 시련과 험난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견고한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북·남대화를 지지하고 평화통일을 찬성한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빠른 시일내에 북한과 정상화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아사히신문 6월 1일자 사설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중국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하는 전방위선린외교 활동을 눈부시게 전개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가 현존하는 주요한 도전중의 하나이다.”

보다 완화된 국제정세와 남·북간 대화의 진전에 따라, 중국

의 對한국경제관계는 점점 밀접해지고 있다. 1991년 12월 한·중 양국은 무역협정과 1992년 5월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양국간의 무역액 역시 매년마다 증가하여 1991년에는 58억달러에 달하였다. 한국위 對중국투자는 1991년에 7900만달러 였으며 인적교류는 9만명에 이르렀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의 4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 된 것이다. 1992년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북경에 있는 한국산업연구소대표인 한광수씨는 1~2년내 한·중 무역액은 100억불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언명하였다.

한·중간의 해·공수송 역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1989년 8월에 개항된 전세기 항로는 지금은 서울~천진간에 한두편이 뜨고 서울~상해간에는 매주마다 뜨고 있다. 해운항로에 있어서 인천과 상해, 대련, 천진간과 부산과 천진, 대련, 청도와 상해를 각각 매월마다 4개의 컨테이너船이 왕래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위해와 인천~천진간에 서틀 여객선이 있다.

경제관계 발전에 따라, 한·중 외교관계 설립요건은 이미 성숙되어 있다. 한·중 정부는 교섭을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기회를 포착하고 기본적인 국가이익과 양국민간의 염원아래 1992년 8월 24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추진할 것을 결정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한·중 양국이 쌍방간 관계발전에 있어 새로운 무대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인 것이다.

한·중 외교관계 설립에 따라 여러분야에 걸친 우호적인 협력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무역관계는 현수준에서 더욱 진전될 것이며 다른 분야에서의 양국간의 협력 역시 지

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쌍무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의 안정과 화해, 그리고 아·태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봉총리는 이상옥 한국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경제관계와 양국간의 무역 발전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이 분야에서 협력은 이미 상당 수준에 달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관계 설립은 확실히 쌍방간의 보다 더 큰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중국은 대한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설립이후 8월 24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중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는 평화 5원칙에 근거하여 우호협력과 선린외교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중·조간에 체결된 조약과 협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언급하였다.

노태우 한국대통령은 중·한외교관계 설립에 관한 8월 24일 字 특별성명에서 “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였다. 이 성명은 한국은 이 사건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으며 확실히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한국통일을 촉진, 가속화 하는데 유익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여론은 노대통령의 선언을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중요한 진보라고 간주하고 이를 다같이 환영하였다. 미국무부는 중·한 외교관계 설립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여론도 역시 이를 환영하였다.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중·한간에 광범위한 교류가

확대될 것이며 중·한 외교관계 설립은 同地域에서의 平和와 안정을 확고히 하는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중·한 외교관계는 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의 붕괴를 촉진할 것이다. 본인은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정세의 진전을 쫓아 빠른 시일내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토 론

사회자: 金裕南(檀國大 美·蘇研究所 所長)

토론자: 柳世熙(漢陽大 中·蘇研究所 所長)

文首彦(崇實大 教授)

崔宜喆(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長)

김유남: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표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세희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유세희: 감사합니다. 이중통역을 피하기 위해 한국어로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高선생님께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하신 논문과 발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북한에 동정적인 반면 오늘 발표는 중립적이라는 인상입니다. 북한에 동정적인 것은 현재 중국입장으로서는 당연한 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몇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선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高선생의 지적처럼 북한은 국내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은 북한이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한국으로서도 별 이의가 없는 북한과 일본의 수교,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비단 남북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국 모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보고한 시설, 그리고 민수의 군수전용 등을 막는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번째 질문은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남북상호사찰 보다 나은 해결책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한국과 조기수교한 것은 중국 역시 북한핵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으로 보는데 高선생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정말로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보시는지요.

高선생은 논문에서 북한도 상당히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보기에 북한이 체제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高선생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북한이 언제쯤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또 하나는 오전에도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한·중수교도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일부 비판적 여론을 소개하자면 중국이 현상유지정책의 일환으로 두개의 한국정책을 개진해 왔고 한·중수교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을 위한 안정적인 외적 환경의 필요성 때문에 현상

유지정책을 쓴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확인된 것은 아님니다만 북경외교가에서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지지할 수 없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츄프린선생계도 질문이 있습니다만 다른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남: 지금 당장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을 다 모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교수님 토론을 들겠습니다.

문수연: 오늘 논문을 발표해 주신 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세희교수님께서서는 주로 중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주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구소련은 한반도와 관련하여 3가지 목표를 추구했다고 지적됩니다. 첫째는 동북아지역의 안보위협감소와 안보확보, 둘째 이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보, 셋째 극동지역개발을 피함과 동시에 이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통합을 모색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하여 구소련과 러시아는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떤 때는 첫번째를 강조했으며 지금은 세번째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목표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으며 현재처럼 세번째 목표를 강조할 때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6년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을 정점으로 소련의 입장은 변화였고 1987년 페레스트로이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 내부상황은 2년전 쿠데타가 발생할 때 그랬던 것처럼 보수로의 선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코지레프외무장관의 사퇴설이나 가이다르총리경질설 등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서방외교와 서방지원하의 경제개혁을 강조하는 코지레프장관과 가이다르총리 사퇴설은 강력한 보수화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러시아내 보수화가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대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러시아가 다시 안보에 우선을 두면서 대북관계가 긴밀화 될지에 대해서츠프린박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츠프린박사께서는 논문 2페이지(영문 2페이지)에서 블라디보스톡선언이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러시아의 대아시아정책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츠프린 박사 개인이 블라디보스톡선언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IS창립 이후 엘친 외교는 우선적으로 대서방중심이고 다른 한편 CIS 내부정리에 몰두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현재 러시아상황이 정신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엘친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북방4개 도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북아에서 안정과 협력을 강화하려면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는 일본 북방 4개도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츄프린박사의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츄프린박사께서는 한국의 통일을 바란다. 그것이 러시아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CIS의 향방에 대한 질문인데,츄프린박사님은 1년전에 소련에는 두가지 길 밖에 없다. 즉, 완전히 갈라서든지 아니면 강력한 연방 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흘러지는 단계인지 아니면 연방으로 가는 단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남: 매우 긴 토론과 질문이었습니다만 유익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의철 실장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최의철: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주신츄프린박사님과 高선생님께 특히 감사드리고 유교수님과 문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나중에서 하다보니 좋은 말씀을 미리 많이 해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제 임무일 것 같습니다.

첫째, 두 분 모두에게 여쭙고 싶은 문제로서 오전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만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 핵개발문제의 해결책에 있어서 두 분 모두 국제적 제재 보다는 외교적

설득을 누누히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국제여론에 밀려 핵을 양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 북한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외교적 설득이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의 제약성은 이미 문교수님이나 유교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만약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고집하면서 남북상호사찰을 거부할 경우에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두 분은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구소련과 중국은 북한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소련과 중국은 지도층의 교체가 있었고 지도층의 개혁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에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가 과거의 역사를 청산 또는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반해서 북한은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현지도층은 정권유지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개혁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츄프린박사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탈냉전이 본격화되자 다양한 다자간 안보기구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1988년 노대통령께서는 이미 동북아평화회의를 제안하셨고 지난 9월 유엔에서도 동북아국가대화를 거론하셨습니다. 90년에는 에반스 호주외무통상장관이 'Asian Security Cooperation Conference', 세바르드나제 구소련외무장관의 'All Asian Forum' 등 다양한 구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츄프린박사님은 하필이면 클라크 캐나다외상의 'North Pacific Security Dia-

logue'를 특별히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북한이 이 다자간 안보기구에 동참하리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북한은 오히려 개방압력으로 이어질까 우려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아울러 자주 신뢰성이 거론되는 러시아연방의 대북군사무기 판매 및 기술이전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통제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북한 현정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추프린박사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러시아연방의 대북한정책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高대사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앞서 유교수님이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통일을 바라는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북한은 한·중수교의 지연을 중국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노대통령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보다 중국이 오히려 더 수교를 서두른 것으로 발표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를 서둘렀는지 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관계의 발전에 따라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남: 질문에 대한 발표자들의 답변을 들겠습니다.

高 鏢: 먼저 북한의 핵개발문제입니다. 북한은 스스로 북한 내에 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서도 큰 증거가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니다. 미국은 위성사진을 근거로 혐의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불충분 합니다. 북한 내 핵무기의 존재여부는 북·미관계정상화 이후 북한이 개방으로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과거 북한과 핵기술에 관해 협력하였지만 그것은 에너지차원이었습니다. 북한내 핵무기전문가의 존재가능성이 회박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북한의 개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은 청진 등 일부지역을 개방하는 방안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경우 중국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개방정책을 개시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점진적으로 개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셋째, 통일의 방안이 국가연합이나 연방이나 하는 방법의 문제는 있지만 남북한은 공히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가 통일에 불리할 것이라는 견해에는 반대합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상황에서 수교가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네번째는 최실장님께서 제기하신 대북관계 조정의 문제인데, 현재 중국과 북한은 우호조약에 따라 상호원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정책상 지지·원조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츄프린: 많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워낙 질문이 많아 내일 러시아에 대한 별도회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웃음).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것과 5년전이나 10년전과는 달리 러시아 외교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저 역시 이 혼란에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국내적으로 보수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러시아내에는 서방의 원조에 대한 환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짜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제문제는 자체적으로 해야하며 국내적으로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블라디보스톡선언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당시만 해도 미 소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초강대국 입장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 커다란 지정학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선언은 더이상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편 러시아 외교가 서방에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서방에 치중할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태지역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2차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엘친의 아시아순방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북방4개도서 문제에 대해 엘친대통령은 이것이 영토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차대전의 결과를 수정하는 문제로서 이런 각도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CIS의 장래에 관해서는 현재 두가지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우선 하나의 연방을 형성하자는 주장으로 아시아지역 공화국 지도자들이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지난 5월 6개 공화국이 안전보장조약에 서명한 것이 시발점입니다. 열친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10월 10일 이들이 다시 모여 CIS의 성격과 조직규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高선생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자원과 지식의 측면에서 북한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찰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안보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크게 두드러지게 하지 말고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이니셔티브를 따라 가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대화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크게 유익한 일로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통제는 100% 가능합니다. 첨단기술의 판매는 절대 안 할 것이며 이미 판매한 것에 대한 부품 정도입니다. 북한은 지불능력도 없습니다.

김유남: 이제 9분정도 남았는데 10분 연장하여 20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플로어로 토론을 돌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각각 두개씩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조순승(국회의원): 북방4개 도서문제가 영토문제가 아니라 전후 처리문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츄프린: 개인 의견으로는 이 문제는 국제협약에 의해 생긴 것

으로서 법적차원에서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1956년 선언의 한 조항이 문제가 되는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인도(반환이 아니라)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법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의사표시에 불과하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작년 고르바초프가 일본을 방문하여 협상을 하는 가운데 다행히도 그는 “반환”(return)과 “인도”(handover)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박두복(외교안보연구원): 高 선생은 한·중수교로 대북관계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시는데, 러시아도 북한과의 우호동맹조약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중국의 우호동맹조약은 한·미 조약과 대칭되어 있는 성격이 강한데 이 조약이 현존하는한 북한과의 관계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高 鏞: 북한과의 동맹조약 수정은 국제적 상황의 변화와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규정한 일부 조항 같은 경우는 한국과의 수교에 따라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수정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점진적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유남: 이상으로 두번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綜合討論

向後 對北韓政策 推進方向

빈 면

토 론

사회자: 韓昇洲(高麗大 教授)

토론자: 第 1, 2 會議 司會 및 討論者

한승주: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토론을 겸하여 한국의 대북한정책에서의 옵션, 즉 정책적 선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선택을 고려하기 전에 정책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현실적, 비현실적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회의를 하면서 저는 한국적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대여섯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남북한간 평화적 관계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군사적 위협이나 체제전복 등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의 체제가 보다 다원적, 개방적, 민주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이산가족재회, 이주의 자유 등 남북간의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남북통일의 정치,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격차가 너무 커서 한국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된다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체제수호 등 다른 목적에서 개혁, 개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목적의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선택이라는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논의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사회자의 욕심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체제강화와 관계없이 경제협력이나 지원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둘째, 조기통일에 역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남북한간 장기공존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이른바 연계문제, 즉 경제협력과 다른 문제를 연계시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최근 핵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높아 지기는 했지만 인도적 문제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넷째, 대북군사태세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는 문제로서 미군주둔, 군축 등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북한에 큰 소요가 있을 때 또는 난민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이냐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있어서 다변적 조치, 지역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어떠한 방안과 입장을 취하고 북한의 참여를 얼마나 돕고 조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능한한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외국의 전문가분들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한국의 정책적 선택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의에서 사회를 보신 김유남 박사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김유남: 월권행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사회를 보면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못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추프린부소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고르바초프 전소련대통령이 10월 9일 한국의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방한해 연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옐친대통령에 한달여 앞서 그러는 것이 한국이 외교를 잘하는 것인지, 러시아 지식인은 이것을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高부원장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과 러시아가 11월에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국이 형평을 지키려면 중국과도 조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그것이 외교를 잘 하는 것인지에 대해 중국 지식인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프린: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문제와 관련 고르바초프는 한국방문에서 환대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한 국민들이니까요(웃음). 그의 방문은 국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교적인 것이지만 아직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주목을 끌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그는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지나친 단순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북아는 러시아에게 안보나, 경제협력, 문화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옐친 방문이 연기된 것은 유감입니다. 그는 방한 기간중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인데 이는 한·러관계를 법적으로 뒷받침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협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안전보장 등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같은 협정에 서명할 것인가에는 간섭하고 싶지 않습니다. 옐친의 방문은 외채상환 등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관계에서 현재 심각한 마찰은 없습니다. 다만 대북관계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은 매우 중요한 회담입니다.

高 鏢: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얼마 되지 않고 수교협정에도 기본 정신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관계가 발전되면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경서: 우리의 통일방안은 애초부터 기능주의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북한이 기능주의적 접근에 호응하여 기본합의서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전을 보고 있을 때 핵문제에 발목을 잡힌다면 이전에 북한이 주장했던 포괄적 접근에 대한 비판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핵문제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한 안에 들어가 변화시키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강경한 미국이 문제입

니다. 우리의 목적이 북한을 개방시켜 통일시키려는 것이라면 기능주의적 접근을 살려야 합니다. 이산가족문제만 해도 굳이 북한이 싫어하는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판문점에서 만나는 방안 등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 물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칙은 다른 체제와 이념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김영진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베이커의 언급이나 뉴욕타임즈 사설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2+4, 또는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국은 진정 쌍무적 접근만 고집하고 있습니까?

김영진: 박교수님 질문에 답하기 앞서 우선 한교수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른바 연계의 문제, 즉 경제협력을 핵이나 가족방문에 연계시킬 것이냐 아니면 경제협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나는 후자에 찬성합니다. 아주 대규모의 경제교류는 차치하더라도 전향적 태도는 필요합니다.

박교수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미국 고위관리들의 발표문건들을 읽어보면 미국이 유럽모델을 적어도 한반도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승주: 지금 허심탄회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

리에는 실제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 나오신 분들중 발언하고 싶은 분은 말씀하십시오.

대니 러셀(미대사관): 미국은 한국민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핵문제, 집단안전보장문제에 대해 미국은 여러 아이디어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한국과 체결한 비핵화선언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문수연: 집단안전보장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주둔할 지 몰라도 안전보장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역할증대를 바라지만 우리 입장으로서 이것을 선뜻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집단안보를 대소전략차원에서 이야기 해 왔는데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자간안보기구는 특히 소련이 강조해 온 것인데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소련의 제안을 중재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나아가 폭넓은 동북아 협력문제를 다루면서 남북군축, 평화정착도 가능할 것입니다.츄프린박사가 캐나다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흥미로운데 아마도 미국 주도에 대한 거부감인 것 같습니다.

한승주: 마쓰나가 소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김영진 소장님이 지적하신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처리에 관한 미·일간의 입장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본이 언제까지

현재의 대북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일본의 역할증대와 집단안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쓰나가: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솔직한 의견교환은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흥미있는 논쟁은 일본에게도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솔직한 의견교환 위에 건설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북한도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민간단체인 국제문제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1년전부터 북한의 유사기관과 인적교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교류는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북한에는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독일 통일에서도 결국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국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핵문제가 관계정상화의 장애가 되어서는 않된다는 생각도 해 보지만 다른 장애가 또 있습니다. 예컨대 남북한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심각한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적 지역 경제블럭화에 따라 극동에서도 지역주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와 관련 북한의 참여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미군주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군의 주둔은 정치적으로

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불가피한 일입니다. 미국은 세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군사, 정치 대국입니다. 동북아시아가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미군의 주둔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보장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역할증대를 바라지만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미국을 지원하는 차원에 머물 것입니다. 일본의 역할은 한마디로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일본과 한국 두나라는 보다 돈독한 협력을 위해 모든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을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 산하단체, APEC에서 협력하고 공동 노력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통일방법론에 있어 한국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과 현실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반도에 안정된 번영이 오고 이 지역전체가 세계평화의 핵심지역이 될 테니까요.

유세희: 남북관계에서 대북경제협력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능력문제입니다. 능력이 안되면 경제협력을 하고 싶어도 안되니까요. 제 생각은 상호이득이 되는 분야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능력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통일형태에 대해서는 조기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장기공존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도 조기통일을 말하면서도 흡수통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의 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혹만 풀 수 있다면 방법에는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체제 수호와 경제성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핵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 의사가 분명하다면 사찰형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미국과 일본이 관련되어 있어 문제가 복잡합니다. 하여간 북한은 당분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이익인지 북한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주자는 것이죠.

한승주: 플로어에서 몇 개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문도(전 통일원장관): 일 북한 수교의 결과는 일본의 돈이 북한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통일이 더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두개의 주권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 쪽이 붕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기(서울대 교수): 마쓰나가소장은 지역주의를 강조했지만 지역주의는 힘이 강한 나라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입니다. 일본이 혜택을 주변에 돌릴 용의가 있는지 또 최근 일본의 군비증강과 플루토늄 수입의 저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케다(일본대사관 참사관):츠프린씨와 조승순의원간의 논쟁에
첨언하고 싶은데요.츠프린씨는 북방영토문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서 영토는 반환
하지만 북방4개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문서로 작성된 바
있습니다.물론 소련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니다.

츠프린: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입장변화와 관련하여
소련주민이 아니라 러시아주민으로서 제가 견지하는 입장은
미국과 일본의 조약은 지역안보의 축으로서 앞으로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의 장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핵, 군사, 경제, 인권
의 문제가 아닙니다.진짜 문제는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입니
다.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이후 신행정부의 수립과 김일성의
죽음에 따라 남북간 대화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마쓰나가: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그것은 결코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굳건히 믿건대 경제지
역화는 결코 그 지역강대국에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모든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어야만 지역화는 이루어질 것입
니다.일본의 과거청산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분명히 지난날
의 과오를 청산할 것이지만,그것 때문에 현재의 일을 못해서
는 안될 것입니다.

한승주:이것으로서 종합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
다.

<附錄：會議概要>

會議日程

9月 29日 (火)

歡迎 晚餐

18:30-20:00 李秉龍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主催

9月 30日 (水)

開會式

09:00-09:30 登 錄

09:30-09:35 開會辭：李秉龍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09:35-10:00 基調演說：姜英勳 (大韓赤十字社 總裁)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第 1 會議：美國, 日本의 對北韓政策

10:00-12:00

• 司會：金瓊元 (社會科學院長)

• 發表：松永信雄 (日本 國際問題研究所長)

“韓半島 情勢와 日·北韓 國交正常化 交渉”

金英鎮 (조지와싱턴大 東아시아研究所 所長)

“美國의 對北韓政策”

• 討論：朴慶緒 (中央大 教授)

崔相龍 (高麗大 平和研究所長)

吉烜宇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午 餐

12:00-13:30

第 2 會議：中國,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13:30-15:30

- 司 會：金裕南 (檀國大 美·蘇研究所長)
- 發 表：게나디 추프린 (러시아科學院 東洋學研究所 副所長)
“러시아의 對北韓政策: 目標 및 不確實性”
高 鏞 (中國國際問題研究中心 副總幹事)
“韓半島 情勢와 中 韓關係”
- 討 論：柳世熙 (漢陽大 中蘇研究所長)
文首彥 (崇實大 教授)
崔宜喆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長)

휴 식

15:30-15:50

第 3 會議：綜合討論—向後 對北韓政策 推進 方向

15:50-17:50

- 司 會：韓昇洲 (高麗大 教授)
- 討 論：第 1, 2 會議 司會 및 討論者

參加者 名單

基調演說

姜英勳 (大韓赤十字社 總裁)

司 會 者

金瓊元 (社會科學院長)

金裕南 (檀國大 美·蘇研究所長)

韓昇洲 (高麗大 教授)

發 表 者

게나디 류프린 (러시아科學院 東洋學研究所 副所長)

金英鎮 (美國 조지와싱턴大 東아시아研究所 所長)

松永信雄 (日本 國際問題研究所長)

高 鏢 (中國國際問題研究中心 副總幹事)

討 論 者

文首彥 (崇實大 教授)

朴慶緒 (中央大 教授)

柳世熙 (漢陽大 中蘇研究所長)

崔相龍 (高麗大 平和研究所長)

崔宜喆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長)

吉烜宇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